

# 조선시대 책은 어떻게 유통됐나(2)

독서의 풍속사— 12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시대 책은 개인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관서, 교육기관 등에도 하사됐다. 중앙에서 지방에 일방적으로 하사하기도 하고, 지방관의 요청에 따라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보급·유통된 책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 농민이 문맹인 이상 많은 서적의 공급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조선의 통치자들은 농민이 문맹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국가는 오로지 통치에 필요한 책만을 유통시켰다.

지난 호에서 주자소와 교서관에서 발행한 서적이 소수의 고급관료에게 하사됐던 사실을 언급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개인 외에 책이 하사되는 때도 있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서, 교육기관 등에 하사된 경우다. 여기에 대해 약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의 행정 기관을 보자. 《세종실록》에서 눈에 띄는 대로 몇 가지 실례를 찾아 열거한다.

“《당률소의(唐律疏義)》를 중앙과 지방의 관원에게 반사”(《세종실록》9년 3월 23일).

“경상도 감사가 진상한 수학서인 《양휘산법(楊輝算法)》 1백권을 집현전과 호조, 서운관의 습산국(習算局)에 하사”(《세종실록》15년 8월 25일).

“어학서인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를 승문원과 사역원(司譯院)에 하사”(《세종실록》16년 6월 21일).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중앙의 기관에 하사되는 서적은 주로 국가 권력의 집행에 필요한 법전 따위의 서적이거나 혹은 수학 서적이거나 어학 서적 등 실용적인 것들이었다. 일반적인 독서물은 관청에 하사되지 않았다.

## 지방 지방에서 관찰사의 반사 요구 찾아

교육기관은 중요한 반사의 대상이었다. 서울의 교육기관은 성균관과 사부 학당(四部學堂)이 있었던 바, 세종 7년 11월 2일 경상도 감사가 올린 《입학도설(入學圖說)》《주역》《시경》《춘추》《중용》《대학》《논

어》《효행록》《전서(篆書)천자문》《대자(大字)천자문》 등을 성균관·교서관·사부 학당에 반사했고, 성종 7년 11월 5일 《대학》《중용》 각각 40권, 《논어》《맹자》《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 각각 30권, 《성리대전》 5권을 성균관에 간직하게 했다. 세조 4년 8월 26일에는 《역학계몽요해(易學啓蒙要解)》를 문신과 성균관 유생에게 내려줬다. 이런 예들은 광범위한데, 대개 경전과 성리학 서적이 주축을 이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 서적을 보급하는 경우다. 이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띤다. 첫째, 중앙에서 지방에 일방적으로 하사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방관의 요청에 따라 하사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대개의 서적은 윤리서, 의서, 농서가 주종을 차지한다. 윤리서라면 《삼강행실도》를 반사한 기록이 세종 이후 《실록》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의서는 세종 11년 1월 29일 제주도에 의서 17벌을 보낸 것을 비롯해 《세종》 24년 2월 25일 함길도에 새로 설치한 고을에 《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향약집성방》《본초화제(本草和劑)》 등을 보낸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함길도처럼 새로 개척한 지방에 의서를 보낸 기록은 자주 보인다. 이런 의학서를 보낼 경우도 그 부수는 많지 않았다. 세조 12년 6월 13일에 8도에 보낸 《구급방》은 2건일 뿐이었다.

농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반포된 경우에 해당한다. 세종 12년 2월 14일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여러 도(道)의 감사와 주·군·부·현과 서울 안의 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했다. 이 책을 광범위하게 반포한 것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실록》을 찾아보면 각 도의 관찰사가 서적의 반사를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허락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세종에서 중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즉 서적의 반사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함경도와 평안도,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라는 점이다.

이곳들은 당시 새로 국토로 편입된 곳이거나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에서 서적의 반사를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곳들은 인구 조밀지이거나 자체에서 서적 간행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서적의 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함경도 같은 오지라면 사정이 다르다. 세종 3년 9월 19일 함길도 관찰사는 이렇게 청하고 있다.

“도내에 서적이 적어서, 배우는 자가 강습할 수 없으니,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내려 주셔서, 학도들을 편민케 하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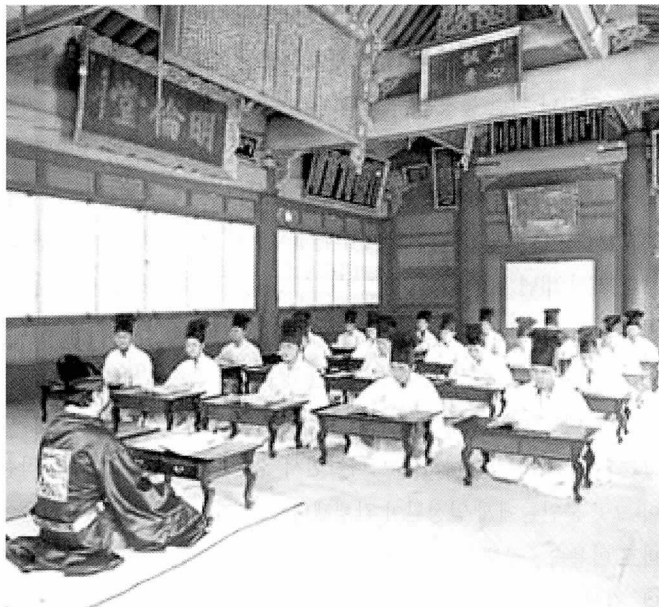
## 지방교육기관에도 반사됐으나 수량 많지 않아

반사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거개 관찰사의 요구로 감영으로 하사됐다. 세조 24년 4월 23일에는 함길도에 사서와 《소학》 3벌을, 성종 6년 11월 24일 영안도에 《소미통감(少微通鑑)》《춘추좌전》《고문진보》《문선책문(文選策問)》《고부(古賦)》 등을, 성종 12년 2월 16일 역시 영

안도에 사서 및 《소학》《효경》 등을 하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방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 역시 서적의 반사대상이었다. 세종 23년 10월 18일에는 《직해소학(直解小學)》 2백본을 인쇄해 각 고을의 향교와 문신들에게 반사했고, 세종 26년 8월 14일에는 《통감훈의(通鑑訓義)》《성리군서(性理群書)》《근사록》《통감강목(通鑑綱目)》《유문(柳文)》《한문(韓文)》《통감절요(通鑑節要)》《집성소학(集成小學)》《사륜집(絲綸集)》 각각 한 벌씩을 청주 향교에 하사했으며, 세종 27년 1월 29일에는 평안도 무창·우예·위원 등의 고을 향교 생도에게 가르칠 사서와 《소학》 등을 하사했고, 세종 17년 9월 21일에 《대학》《중용》《논어》《맹자》《시경》《서경》《예기》《역경》《춘추》《성리대전》 각 2질과 《소학》 10질을 제주 향교에 하사했다. 서원 역시 반사의 대상이었으나, 명종 7년 4월 25일 풍기(豊基)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강목(綱目)》과 《사문유취(事文類聚)》가 하사됐다.

이상의 예로 우리는 국가가 발간한 서적이 국가의 행정력을 통해 지방으로 보급됐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 보급된 서적들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지방관의 요청에 의해서거나 간에 절대 다



조선시대에 교육기관은 반사의 대상이었다. 서울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사부학당에서 주로 경전과 성리학 서적을 하사받았다. 사진은 명륜당에서 강학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서삼경과 성리학 관계 서적 또는 한문을 익히기 위한 문학 서적이었다. 여타의 서적, 예컨대 오락성이 강한 소설 등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는 지방에 부단히 서적을 공급했으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둘째, 지방에 공급되는 서적은 소량이였다. 위에서 열거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책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10부 이하였고, 많아야 수십부를 넘지 않는다. 이런 양으로는 서적의 절대 수요를

“농서는 농민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농민이고, 농민이 문맹인 이상 많은 서적의 공급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조선의 통치자들은 농민이 문맹을 벗어나 두터운 독서층을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가는 오로지 통치에 필요한 책만을 보급, 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필요하다면 지방 관아에서 목판으로 다시 인쇄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필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 통치에 필요한 책들만 보급·유통시켜

왜 소량의 책이 공급됐던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책의 제작 자체가 어려우며 책이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독서층이 얇았는데 있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농사직설》은 세종이 널리 보급하려고 애쓴 책인데, 이 책은 농사를 짓는 당사자인 농민이 읽을 수 없는 한문으로 씌어져 있었다. 세종 19년 2월 15일 왕은 함길도·평안도의 감사에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번에 《농사직설》을 엮어 각도에 반포하였으니, 성의껏 친절하게 가르치고 일러서 농민으로 하여금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관가에서도 역시 농서에 의하여 갈고 심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본받게 만들라.”

농서는 농민이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요컨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농민이고, 농민이 문맹인 이상 많은 서적을 공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조선의 통치자들은 농민이 문맹을 벗어나 두터운 독서층을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가는 오로지 통치에 필요한 책만을 보급·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책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었지만, 그 유통이란 오로지 중세국가의 통치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다. 한심하구나! ■